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90

2023. 03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3년도 건축·도시분야
중앙부처 업무계획

2023년부터 건축도시 정책동향(APU)이

보다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 4회 발간으로 개편됩니다.

vol.90(3월) 2023년도 건축·도시분야 중앙부처 업무계획

vol.91(6월) 의안정보를 통해 본 건축·도시분야 법률 제·개정 수요

vol.92(9월)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건축·도시분야 정책 동향

vol.93(12월) 뉴스·언론보도를 통해 본 건축·도시분야 정책 동향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보도자료는

아우름 사이트의 정책과 연구 ▶ 정책동향

(<http://www.aurum.re.kr/Research/ResearchMain.asp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90

발 행 :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 이 영 범

발행일 : 2023년 3월 31일

I S S N : 2635-5140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 이종민, 류수연, 박미래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 044-417-9697

이 메 일 : leejm@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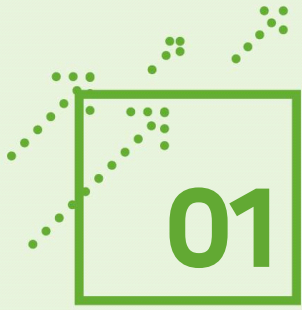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 건축·도시 분야 6대 주요 정책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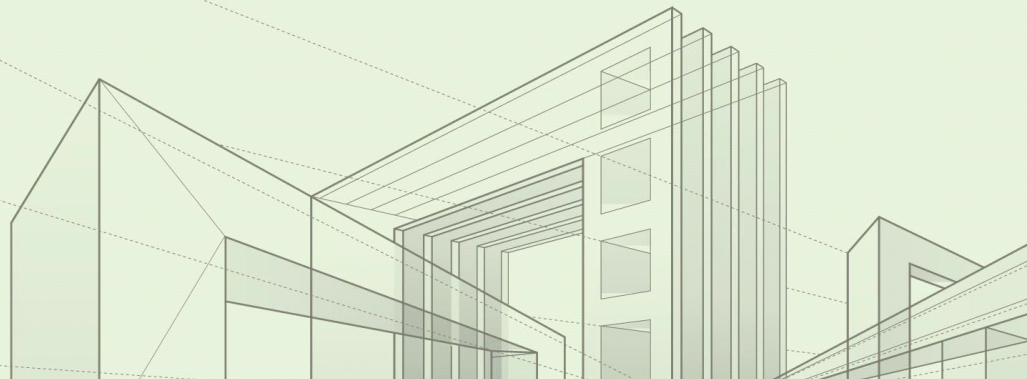
02 ●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건축·도시분야 6대 주요 정책테마

건축·도시공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중앙부처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① 인구감소 대응, ② 지역주도 혁신, ③ 탄소중립 대응, ④ 재해재난 안전,
⑤ 디지털 기술 혁신, ⑥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6대 주요 정책테마를 도출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건축·도시분야 6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1 인구감소 대응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 생활인구를 고려한 생활권 계획 도입,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한 귀촌귀농자 지역 정착 지원
기획재정부	•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인구 개념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환경 개선 및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인프라 및 체계 개선
문화재청	• 지역 대표 문화유산을 지역재생 핵심 동력자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보건복지부	•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대비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주거시설 제공, 교육 지원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용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테마2 지역주도 혁신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 지역 특화산업(도심융합특구, 국가산단) 육성, 지역주도 맞춤형 新성장거점 조성
기획재정부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및 지방시대위원회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지자체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 농촌특화지구 도입 방안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문화특화클러스터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및 특례 적용 추진, 지역주도 투자프로젝트 밀착 지원
행정안전부	•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주도 발전 지원

[건축·도시분야 6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3

탄소중립 대응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 친환경 건축·도시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마련 및 공공건축리모델링 확대
기획재정부	•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마련 및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 추진
산림청	• 도시열섬 완화, 탄소저장,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환경부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지자체 특성별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테마4

재해재난 안전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 건축물 개선 및 재난재해 진단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홍수 대비 시설보수 및 중·소 저수지 치수 능력 확대
문화재청	•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예방·대응방안 마련, 자연유산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지역보건소 간 연계 강화 및 민·관 보건의료협의체 운영
산림청	• 국가산림경관 자원을 도시경관, 산림재해와 연계하여 통합관리 추진
해양수산부	•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 및 재해 완충공간 확보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재난 발굴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위험요소 발굴센터 신설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 화재취약 및 대규모 피해 우려 시설 중심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 스마트 홍수 관리, AI 홍수예보, 디지털트윈 도입, 홍수위험지도 조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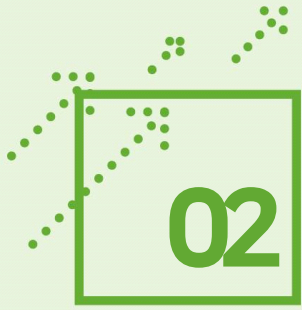
건축·도시분야 6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5 디지털 기술 혁신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2027년 완전자율주행 (LV4) 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기반 구축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원천데이터 구축 및 민간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디지털 관광 전환을 위해 노후시설 스마트팜 전환 및 집적단지·지역특화 시범단지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신규 국가산단 조성(국토부·산업부 협업) 및 필수 인프라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테마6 부동산 시장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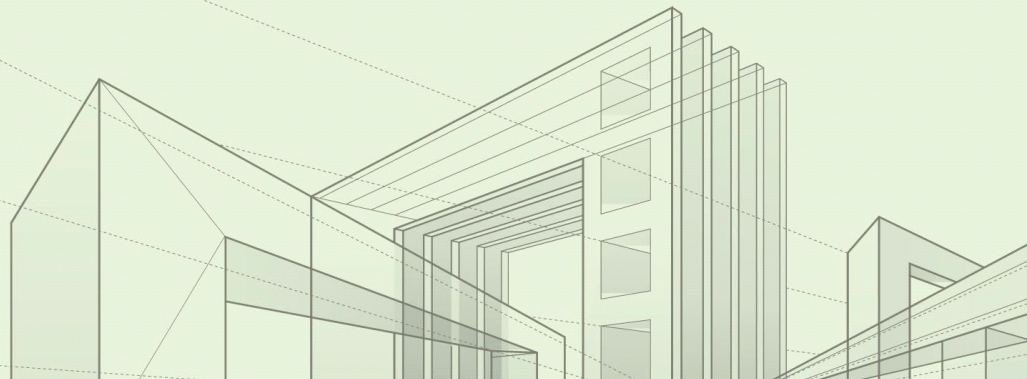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 주택공급 기반 강화(자금 지원 및 정비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구현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 정책 지원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및 사업성 제고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건축·도시분야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아래의 중앙부처 업무계획 중 건축·도시분야 유관 계획 수립, 시설조성 및 관리, 제도개선, 산업육성 등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해당 부처의 업무계획 원문은 페이지 우측 상단의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산림청
- 산업통산자원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원문 보기

업무추진 방향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
목표	<div> <div>① 균형발전</div> <div>② 민생안전</div> <div>③ 경제 재도약</div> <div>④ 국민안전</div> </div>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 국토교통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 • 주택공급 기반 강화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 건설·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	---	-------	---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취약 계층·서민 지원 강화 • 민간 주도 270만호 공급계획,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마련 • (이동혁신) 국민들의 교통 불편 완화 및 교통안전 제고 • 거리두기 완화 후 증가한 이동 수요에 적극 대응 • (공간혁신) 지역 교통망 확충 등 균형발전 추진과 도심환경 개선 • (경제재도약) 규제완화, 산업질서 확립 등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대규모 해외 수주 여건 조성 	보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 이탈 심화 및 성장동력 감소 등 악순환 지속 • 고금리·경기둔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면밀한 대응 필요 •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열차 탈선사고('22년 3차례), 혼잡 문제 등 안전 위협 요인 여전
-------	---	-------	---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B 규제개선)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을 확대하여 GB 활용도 제고 • (도시계획)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개편 • (토지수용)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을 이양(중도위 → 지도위) • (거버넌스)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전략,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검토하기 위한「지역균형발전지원단」운영 본격화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도심융합특구 범부처 패키지 제공, 지역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신규 조성 • (기존거점 고도화) 공공기관 2차이전, 행복도시 행정수도기능 제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지정 • (지역주도 맞춤형 新성장거점 조성) 지역대학 캠퍼스 내 산단·창업공간 조성,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한 귀촌귀농자 지역 정착 지원, 생활인구를 고려한 생활권 계획 도입 •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토 경쟁력 제고) 철도·고속도로·환승센터 등 도시계획 시설 지하화
지역 교통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지방권 광역철도 적기 추진 및 간선망 지속 확충 • (도로) 3개 고속도로, 20개 국도 개통, 민자 고속도로 지속 확충 등 격자형·방사형 순환 국가간선도로망(10x10 + 6R2) 구축 추진 • (공항) 신공항 프로젝트 추진 및 지방공항 운영 내실화

■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 (전매제한) 전매제한 기간 개선 및 합리화 • (실거주, 중도금 대출, 특별공급 기준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특별공급 허용 확대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제도 합리화)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등 지원) PF대출 보증, 분양→민간임대 전환 지원 • (주택공급 기반 확충)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 신규 정비구역 4.8만 호 지정 추진,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 마련, 3기 신도시 추진 및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체계 마련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분양주택 조기공급, 공공임대 입지 및 품질 개선,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통한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원금상환유예 및 전세대출기준 완화 민감등록임대 확대, 임대차법 대안 마련
시장원리에 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 부동산 공시) 규제지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추진 • (LH혁신) 투명성·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개편 추진 • (소비자 보호) 전세사기·집값담합 단속 등 거래 쉼단계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교통망 확충) GTX 적기 개통·착공 추진, 수도권 광역 확대 및 지방 BRT 활성화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보완대책 마련,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범위 확대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준비, 시범운행 지구 지정 확대 및 기반 구축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 무인배송 실증, 스마트물류기술 인프라 확충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 공제조합 역할 강화, 물가상승분 적기반영,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기술형 입찰 확대, 리츠 투자처 확대 및 리츠산업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스마트 시티 데이터허브 보급, 정밀도로지도·전자지도 구축 확대, 위치기반 항공위성 서비스 정확도 개선, BIM 확대 • (기존 물리적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 및 구축,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마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교통안전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취약 요인 집중 관리) 우회전 신호등 도입 및 노인보호구역, 스쿨존 안전 개선 •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 마련, 전기차 대상 지하주차장 화재 방지 및 기계식 주차장 기준 마련, PM·커넥티드카 관리 기준 마련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고 사망자 10%이상 감축)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불량 기자재 관리, 현장서류 간소화 및 현장안전점검대상 확대, 적정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고도화 • (노후 SOC 안전관리 강화) 노후 시설별 관리방안 마련, 선제적 교통 인프라 위험요인 대응
재해 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재해취약 반지하 주택 안전강화 및 지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교통 친환경 전환, 제로에너지 건축 및 공공건축 리모델링 대상 확대,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마련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공원) 임시개방 및 용산시대 전략마련 • (생활친화 건축)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설치 • (공동주택 환경 개선)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주요 업무계획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원문 보기

업무추진 방향

자유, 혁신, 공정, 연대

목표

위기극복 + 경제 재도약

- ① 거시경제 안정관리
- ② 민생경제 회복지원
- ③ 민간중심 활력제고
- ④ 미래대비 체질개선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 국토교통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확대
- 상생·지역 균형 발전
- 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정책

-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
- 주택공급 기반 강화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 민생 물가 안정
- 인구감소 위기 대응
- 건설·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부동산시장 정상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민생·물가안정 대책 추진

보완 사항

- 민생·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필요
-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체질개선 가속화 필요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경기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급격한 통화긴축 등에 따른 주요국 경기위축 본격화 • (대내) 대외여건 악화, 금리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 제약
금융·부동산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민생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오름세 둔화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 상존 • (고용)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 제약
구조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활력 둔화 속 정책대응 여력 제한, 경제구조 변화도 가속화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거시경제 안정관리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부동산시장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주택자 규제 개선) 다주택자를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 및 주택·임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축소, 대출규제 완화• (실수요자 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LTV 규제 완화, 공시 가격 완화 및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주택공급 속도 조절, PF시장 연착륙 지원 등을 통해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임대차시장 안정화)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대출규제 완화, 공공임대 공급확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민생경제 회복지원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물가안정 및 생계비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 피해지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소상공인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IP·로컬 브랜딩 지원, 로컬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스케일업 적극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활성화 유도, 지역거점공항(인바운드시범공항) 지정, 랜드마크 등 인프라 확충 지원

■ 민간중심 활력제고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수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ODA 사업규모 확대, EDCF 대형인프라 사업 연계 지원, PPP 사업 활성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추진
투자촉진·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 촉진) 획기적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신규사업 발굴·발주 확대, 민간참여 제고, 신유형 민자도입 등
신성장 4.0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산업 중심 성장) ‘新성장 4.0 전략’마련,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 정부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선제적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강화, 산업 육성방안 병행 추진

■ 미래대비 체질개선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3대 경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국유재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5년간 16조원+α)·민간참여 개발 활성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위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외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 • (탄소중립 이행방안)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마련, 핵심 감축기술 R&D 지원,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 추진
상생·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구축, 지방투자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산단활성화)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산단조성을 위한 “상생 인센티브 체계” 마련

업무추진 방향

농업혁신, 자율, 창의, 연대·상생협력 강화

목표

- ① 식량 공급
 - ② 농업 성장
 - ③ 농가 경영
 - ④ 농촌 발전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지속
정책

- 스마트 농업 확산, 수출 및 ODA 확대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청년농 및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대전환을 통한 미래성장산업 도약기틀 마련
-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마무리 단계

보완 사항

* 건축·도시분야 해당사항 없음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식량안보 문제 상시화) 러-우 전쟁 이후 식량 보호주의 경향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공급 부족 등 농산물 수급 불안 시 생산자·소비자 어려움 가중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 불안 등에 따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농 등 취약계층은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 등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스마트농업 확산	• (스마트 팜 조성) 노후시설 스마트 팜 전환 및 집적단지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및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수출 및 ODA 확대	• (해외수출) 국가별 기후·환경에 특화된 데모 온실 구축, 해외 건설 등 타산업 분야와 교류·소통 체계 구축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 (안정적 노동력 확보)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부 협업사업 추진 -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 농촌 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주거·융복합산업·관광·재생에너지 지구 등으로 특화 발전 유도 - 정부-지자체간 '농촌협약' 체결 확대 및 통합지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방안 구체화 • (지역자원 활용 농촌재생) 농촌관광 콘텐츠 활성화, 농촌 취락마을 대상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등 생활여건 개선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복합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 농촌 돌봄마을 조성(복지시설 복합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프로그램 제공) •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다양한 유형의 지역서비스 공동체 육성, 농촌형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의 자발적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업무추진 방향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①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 ②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③ 문화유산 보존·활용정책 구현
- ④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확대

지속
정책

-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 국민 문화향유 증진, 관광자원 육성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문화유산 향유 정책 실현
 - 한국 대표 문화유산을 고품격 관광브랜드로 육성 추진
 -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로 지역 활력 촉진
- 세계 속 문화유산 선진국가 도약 기반 마련

보완 사항

- 지자체 등 문화재 관리 현장의 전문성 부족 등 관리역량 미흡
-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갈등 지속
-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 운영 미흡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유산의 역할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 쇠퇴 가속화로 지역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계승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한 기후변화로 대형산불, 풍수해 등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유산 재난대응역량 강화 요구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 안전한 문화유산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역·현장 중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전문성 확보, 지역 연구기반 확충 등 선제적·능동적 현장대응 • (보존지역 관리)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현황 모니터링 강화

■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국민 문화향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브랜드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3대(궁궐, 세계유산, 무형유산) 축전’ 브랜드화, 활용 품격 제고 • (문화유산 관광) 문화유산 관광으로 이끄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콘텐츠 발굴 및 민간 협업으로 여행상품화하여 문화 유산 방문을 활성화하고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
공정하고 차별없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향유 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보편적 접근성 보장, 무장애공간 확대, 정보 접근성 제고 • (취약계층 문화향유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및 문화 소외지역 방문 체험·공연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확대
문화유산 가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산업 육성) 문화유산 산업기반 구축, 신기술 연구개발, 사회적 기업 육성 • 기업참여 활성화 및 청년인턴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 구현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규제혁신·공공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축소 및 규제강도 완화 • 고도 규제 개선 및 민속마을 정비 등 문화재 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경관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건축물 증·개축 규제 완화 및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 육성) 지역 대표 문화유산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선·면 단위 활용으로 확대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생 동력) 역사문화유산을 지역재생 핵심 동력자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지역 공동체 회복) 문화유산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 활용 지역소득 창출 등 자생 기반 마련, 행사 및 사업의 지역주민 활성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예방·대응방안을 위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데이터 구축 및 활용) 문화유산 데이터 축적 및 민간 개방·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에 필요한 원형데이터 축적,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개방 확대

업무추진 방향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관광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스마트·디지털 관광 전환

지속
정책

-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
-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관광거점도시 조성

주요 성과 및 정책 효과

주요 성과

- 전 세계 관광의 롤모델로서 K-관광 기틀 마련
- 청와대 개방을 통한 공간 재구성, 민관이 함께하는 새 정부 첫 관광 진흥 계획 수립
- “약자 프렌들리” 정책 공세적 확대
- ‘열린관광지 조성(20개), 무장애 관광도시(강릉) 최초 조성

정책 효과

- K-컬처 융합형 마케팅 및 출입국 규제 완화로 '22년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235% 증가
-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통해 문화가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K-콘텐츠·K-관광, 국가도약을 이끌 전략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 융합을 통한 독보적 매력으로 관광산업 재도약 추진
코로나19로 심화된 격차를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지역·계층·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공정한 문화 누림으로 국민 행복 추구
창의적·도전적 예술성과를 K-아트로 체계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생적 생태계를 위한 예술산업 육성 및 신 기술융합 미래예술 기반 강화 필요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K-컬처가 이끄는 국가번영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청와대 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로 연결한 클러스터 조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브랜드 육성 • (다시 찾고 싶은 안락하고 편리한 나라) 관광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쇼핑환경 개선 등 편안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생태계를 복원하는 재정비·재도약 전략) 스마트 관광도시 신규 조성 및 관광-ICT 융합형 협력 네트워크 강화, 웰니스 의료 관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등 신시장 창출로 산업 트렌드 선도

■ K-컬처로 행복해지는 국민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문화특화클러스터 육성, 유희시설 활용 문화인프라 조성, 스포츠도시 선정·집중지원 • (지역별 고유 매력 담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선도) K-관광 휴양벨트 조성, 인구 감소 지역을 관광으로 살리는 방문자경제 실현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어울림) 국립박물관 장애인 접근성 종합계획 수립, 무장애 교통수단 도입 • (취약계층의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복지시설 중심 교육에서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자율적 선택권 보장 •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문화소외지역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은퇴 전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연결사회 지역거점’ 운영,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프로그램 제공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상) 의료이용, 인구 등을 고려한 수급현황 분석, 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수립, 이행력 담보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인프라) 응급, 외상, 감염병 등 국가 필수·공공의료 총괄 역할강화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대규모 재난 대응 의료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 대형재난에도 신속·효과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인력 증원해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 - 지역: 지역사회 트라우마 대응 강화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정립 및 인력확충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와 지역보건소 간 연계 강화 및 민·관 보건의료협의회 운영, 취약시설 환기 기준 마련하여 설비지원

■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정책)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대비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 마련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재택의료센터 확대 (현 28개소→'26년 80개소 목표) • (주거)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의료·여가 등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 마련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병원) 디지털전환 선도모형(스마트 수술실 등) 지속개발, 확산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

업무추진 방향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div>신규 정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여가 수요를 반영한 생활권 산림 휴양시설 확대 • 생물다양성 및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도시숲 확대 	<div>지속 정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 지역기반 생활 속 녹색복지기반 조성
---	--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div>주요 성과</div> <p>* 건축·도시분야 해당사항 없음</p>	<div>보완 사항</div> <p>* 건축·도시분야 해당사항 없음</p>
---	---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산림재난 대형화로 국민 안전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정비, 첨단 과학·기술 접목 확대로 예방·대응체계 고도화 •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산림재난 총력 대응
국민 건강자산으로 숲·산림자원 육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지원 • 숲 관련 시설·프로그램 확충, 의·과학 및 건강정책 연계 강화
녹화성공국으로서 그린ODA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산림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 제시 • 산림협력 확대, 국제협력의 주요 브랜드로 산림 육성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산림복지 활성화 및 사회임업 확대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치유) 도시지역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기준요건 개선 • (휴양) 야영, 레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산림휴양시설 확대,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역기반 산림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실내·외 정원(118개소), 스마트가든(296개소) 조성 • (산촌) 이색적인 산촌의 경관을 활용한 산촌관광과 산림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우수 국유림 관광자원화, 산촌관광 콘텐츠개발 등 추진

■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환경임업 활성화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쾌적하고 건강한 국토공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1인당 도시숲을 13㎡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열섬 완화, 탄소저장,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도시숲 조성, 운동장 내 숲 조성(숲 운동장), 수직·벽면녹화 연구 등 다변화 － 도시숲 품질제고, 도시숲 조성·관리지침 마련, 관리실태 전수조사
산림생물다양성과 경관 보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관) 통합적인 산림경관 관리로 경관증진, 재해예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림경관 자원을 도시경관, 산림재해와 연계하여 통합관리 추진

업무추진 방향

「수출 5위 + 제조 3위 + 경제영토 1위」 달성

목표

- 1 수출 플러스 달성
- 2 투자주도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
- 3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 4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엑스포 등 유치
-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지속
정책

- 특화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민간 주도 성장전략 수립 및 성장걸림돌 제거
 -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애로 해소

보완 사항

- * 건축·도시분야 해당사항 없음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수출 및 투자 「쌍둥이 절벽」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 및 수요위축으로 설비투자 지속 감소 예상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IRA, (中)중국몽(中國夢), (日)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글로벌 생산기반의 자국내 흡수전략 적극 추진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원자재법 등 새로운 무역 장벽 등장
세계적 에너지 위기의 상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무기화, 에너지확보 경쟁으로 가격 및 수급 우려 증대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가, 원전·재생e 수요 동시 증가²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및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민간투자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첨단산업특별법) 지정을 통한 신속한 입지조성과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국비 지원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신규 국가산단 조성(국토부·산업부 협업) 및 필수 인프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기반 확충) 지역 클러스터 혁신 역량 강화,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및 적극적 세제, 규제 특례 적용 추진, 지역주도 투자프로젝트 밀착 지원

■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 기여) 부산엑스포 유치, 국제박람회기구 공식일정 대응, 기후산업 박람회 등 개최역량 집중 부각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단단한 해양산업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물류) 스마트 메가포트 본격 개발, 완전자동화 항만 조성 •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1.4조원 유치,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
수출형 블루푸드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푸드산업 육성)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부산) 및 IoT 기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 조성(새만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해양레저도시 K-마리나 루트 조성)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 원스톱 제공, 주요연안에 대규모 마리나 확충 • (해양관광산업 육성) 마리나 비즈센터와 연계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관광산업 콘텐츠 다변화 •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구축) 남해안권(부산·여수·제주 등 연계)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

■ 든든한 국민생활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살기좋은 섬, 연안지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활력 증진) 어촌지역 경제, 생활, 안전 인프라의 종합적인 개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기후변화 대응,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지역 재해안전)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 재해 완충공간 확보 및 친환경 공원 활용을 통한 “국민안심해안” 조성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양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만족 여촌 조성) 어선 및 양식장 임대, 빈집 리모델링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귀어학교 및 지원금 확대로 청년 정착 지원

업무추진 방향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목표

- ① 일상이 안전한 나라
 - ②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 ③ 일 잘하는 정부
 - ④ 함께하는 위기극복
 - ⑤ 성숙한 공동체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 핵심역량 강화 및 자치개혁 촉진
- 지역주도 경제 활력 회복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강화

지속
정책

- 생활안전망 구축
-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지역 지원 정책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디지털플랫폼정부 대국민서비스 확대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각종 재난 및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안전대전환 활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수립

보완 사항

-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시스템 점검 및 개선 요구
-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 필요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가속화와 자연재난 빈도 증가, 사회환경 다변화와 대형 사회재난 지속 발생 고령화와 재난안전 사고 취약 계층 증가, 신종 안보위협 현실화 등 국민불안 심화

구분	내용
지방시대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지자체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우려 점증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발전에 따른 민간서비스 혁신과 공공부문 적극 도입 필요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일상이 안전한 나라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예측 및 대비) 신종재난 발굴 및 환경변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신설을 통해 위험요소 상시 발굴·평가 및 관리 - 기후변화에 대비한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등 침수방지대책 마련, 디지털 위험 대비 핵심기능 다중화 추진 •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상시 상황관리, 지역 안전 협력·역량 강화, 훈련·매뉴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군·구 재난상황실 운영 및 CCTV 영상정보 활용 초기상황관리 강화 - 자치단체 중심 협력체계 및 관리 기능 강화(자치경찰, 재난사태 선포권 등) - 국가훈련 체계 개선 및 주요 이슈별 중점훈련, 매뉴얼 디지털화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안전관리) 데이터 통합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및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원스톱 제공 서비스 창구 「국민안전24」 신설 - 각종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강화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재난피해 지원) 피해 지원 내실화 및 민간주도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파손 지원기준 상향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보급 확대, 자기규율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취약층 재난안전 피해 국가 통계체계 구축 및 어린이 이용·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빅데이터기반 환경 정비, 보행환경 실태조사 추진 • (국민참여활성화) 「국민안전제안」, 「스마트국민제보」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기회균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인구감소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생활인구 활성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생활인구 도입 및 생활인구를 고려한 각종 제도 적용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지역 주도 발전) 재정자주권, 맞춤형 자치모델, 고향사랑기부제 안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자율·책임 중심의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 수립- 특별자치지자체 특례 발굴 및 설치 지원, 행정구역 개편 지원- 지역활력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부제 안착

일 잘하는 정부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정부혁신과 현안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체계 정비, 데이터 공유 · 연계 ·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 (데이터기반 대응 및 해결) 국가적 문제 사전진단 및 대응을 위한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 ‘시빅테크’ (Civic-Tech) 방식 도입

함께하는 위기 극복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주소정보) 신산업 발전 핵심 인프라로 주소정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 확대,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드론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등) 개발·보급으로 상용화 견인 •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간 클라우드 시장 창출,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부문 성장 지원 강화

■ 경찰 : 민생치안 확립 및 준법질서 구현

세부계획

- **(튼튼한 민생치안 확보)** AI·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분석시스템(Pre-CAS)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체계 구축 등 생활 주변 불안요인 해소
- **(엄정한 법질서 확립)**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보행안전 인프라 확대 등 교통 안전정책 고도화
- **(선도적 미래치안 전개)** 미래치안정책국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과학기술 기반 치안활동(차세대 CPTED) 고도화

■ 소방 : 선진 소방안전체계 구축

세부계획

- **(소방안전관리 강화)** 화재취약 및 대규모 피해 우려 시설 중심 안전관리
- **(선제적 대응기반 구축)** 특수장비 확충 및 차세대 119시스템 개발을 통한 상황시스템 연계 확대

업무추진 방향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목표

① 미래가치

② 경제활력

③ 민생·안전

2022년 대비 2023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스마트 그린도시 본격 조성
- 공공기관 도시·건물 부문 탄소배출 감축
- 녹색산업 수출 지원 확대

지속
정책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및 시설 관리
지속

주요 성과 및 정책 효과

주요 성과

- 2030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 수립 진행
- 수소·전기 등 무공해차 확대
- 2022년 서울 침수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보완 사항

-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 첫발
- 2015년 이후 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 전망('21년 $18\mu\text{g}/\text{m}^3$ →'22년 $17.5\mu\text{g}/\text{m}^3$)
-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피해 증가 • 국내외 환경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초미세먼지 • 노후 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 대규모 인명피해의 잠재된 위험
경제성장의 핵심 가치가 되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잠재적 新 경제성장 동력 • 환경이 기업에 대한 투자기준으로 작용 •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가 국제 흐름으로 대두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기후대응 모범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이행)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안착 및 대상 확대, 「온실가스감축인자 예산제도」 확대 방안 검토 • (탄소중립) 지자체 특성별 감축 수단을 종합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지속 가능 생태계 서비스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 국립공원 이용 시설(무장애 탐방 인프라, 노후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충,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공간) 도시 내 단절·훼손된 유희지(폐철길, 폐공장부지)를 복원하여 서식지 연결 및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 제공

■ 국가 경제와 함께 하는 환경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녹색산업 수출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 지역별 전략 수출) (중동·개도국) 전통적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 지역 수요 발굴, (북미·EU) 새로운 글로벌 환경가치를 반영한 신성장 분야 진출 • (녹색 교두보 확보) 재생e 시설, 그린수소 생산시설, 산업단지 상하수도,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수주 추진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ODA) OECD 중위권 수준으로 그린 ODA 확대 및 개도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환경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주요정책과제	세부계획
풍요롭고 안전한 맑은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관리) 스마트 홍수 관리, AI 홍수예보, 디지털트윈 도입, 홍수위험지도 조기 구축, 극한 강우 대응 인프라 구축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적인 정주 환경) 새집증후군 물질·미세먼지·방사성 물질 관리, 공동주택 소음 기준을 강화

건축도시 정책동향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 자료와 정책 정보 및 학술 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 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